

‘협동조합 협상권·대금 30일 지급’… 中소 입법 요구 본격화

중기중앙회, 국회 하반기 32개 과제
10개 핵심과제 중점 처리 요청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요건 완화
탄소중립 지원·중대재해법 현실화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중기중앙회가 제22대 국회 하반기에 중점 처리해야 할 업계 입법 현안을 담은 ‘제22대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32개를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제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등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입법과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에 두루 걸쳐 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대·중소기업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제22대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 과제

- ✓ 을(乙)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 ✓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고도화
- ✓ 영세 중소기업 현장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 ✓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및 상생환경 구축
- ✓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단축
- ✓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노란우산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 ✓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탈탄소 지원체계 마련
- ✓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고도화(제도 적용 원재료 요건 완화, 미연동 제도 개선)를 건의했다.

현재 국회 산자중기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주고, 공정거래

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고도화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미연

동 합의 규정’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요구 제한 및 수탁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미연동 합의를 허용하는 등 예외로 뒤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이자는 내용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도 핵심과제에 담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질서 규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제도화를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 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및 탈탄소 지원체계 마련이 대표적이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특별법’은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한계를 극복하고 6개 주관부처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성이 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를 통해 지연과제에 대한 규제합리화 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내에 규제샌드박스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제외 등 현장을 고려한 고용노동 분야 제도 개선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입법과제도 핵심과제에 포함했다.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경우 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고령인력활용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D현대일렉트릭, 유럽 해상풍력 공략 본격화

폴란드 대형 프로젝트에 전력기기 공급
첫 현장 실적 확보…추가 수주 발판

HD현대일렉트릭이 유럽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핵심 전력기기를 납품하며 북미 중심의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의 275킬로볼트(kV)급 변압기와 분로리액터를 탑재한 대형 해상변전소(OSS)가 최근 베트남 붕파우를 떠나 폴란드 발트해로 향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의 변압기와 분로리액터가 설치된 해상변전소가 유럽 해상풍력 현장으로 운송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변전소는 폴란드 연안 약 40km 해상에 조성되는 ‘발티카 2’에 설치된다. 발티카 2는 덴마크 에너지기업 외르스테드와 폴란드 국영전력기업 PGE가 공동 개발하는 설비용량 1498MW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다.

발티카 2는 107개의 풍력터빈과 각각



HD현대일렉트릭이 공급한 275kV급 변압기와 분로리액터가 탑재된 해상변전소가 폴란드 발트해의 ‘발티카 2(Baltica 2)’ 해상풍력 프로젝트 현장으로 출항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375MW의 용량을 갖춘 4개의 해상변전소로 구성되며 2027년 4분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해상변전소는 여러 풍력터빈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육상 전력망으로 전달하는 설비다. HD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는 전압을 높여 해저케이블을 통한 장거리 송전을 가능하게 하고 분로리액터는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해상풍력용 전력기기는 염분과 습기, 진동, 온도 변화에 장기간 노출된다. 설치

이후에는 현장 접근이 제한돼 점검과 부품 교체도 쉽지 않아 육상용 제품보다 높은 수준의 내구성과 운전 신뢰성이 요구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납품을 통해 고신뢰성 제품이 요구되는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현장 적용 실적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납품 실적이 향후 유럽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제품 신뢰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이 장기적인 해상풍력 확대 계획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력기기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은 올해 1월 북해에서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100GW의 해상풍력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북해 해상풍력 설비를 2050년까지 300GW로 확대한다는 기존 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상변전소용 변압기와 분로리액터 등 전력기기 수요도 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공모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 3개 유형 모집
규제개선·지역경제 기여도 등 평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후보과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실

증하는 광역연계형특구 등 3개 유형이다.

4개 인팜을 선정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제도다. 지방정부가 특구 계획을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서비스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그동안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

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되는 등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구 후보과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제출 기간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해 규제개선 과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11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특구의 경우 해외 실증·인증의 필요성을,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협력 체계와 규제개선 효과의 광역단위 확산 가능성 등을 추가로 평가해 각 특구 지정 취지에 적합한 후보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LCC, 환율하락·여객 증가에 실적 회복세

3분기 적자폭 축소 전망

원·달러 환율 하락이 저비용항공사(LCC)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며 3분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항공유·리스료 등 달러 결제 비용 비중이 높은 구조상 원화 강세가 수익성 개선과 재무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는 덕분이다. 다만 고유가와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주요 LCC들은 성수기에도 적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LCC의 3분기 영업손실은 2분기보다 일제히 축소될 전망이다. 트리니티항공은 1820억원에서 305억원, 진에어는 731억원에서 70억원, 제주항공은 524억원에서 64억원, 에어부산은 355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1%, 23.4%, 26.4%, 34.4% 증가할 전망이다.

여름 성수기 여객 수요 확대와 환율 하락이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는 지난 8월 국제선 여객이 930만 57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집계했다. 지난 1월 종전 최고치인 903만 7511명도 넘어섰다. 환율 여건도 개선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8일 1383.3원을 기록해 지난 7월 2일 1555.8원 대비 두 달여 만에 170원 이상 하락했다. 원화 강세는 달러 결제 비용뿐 아니라 LCC가 보유한 외화부채의 원화 환산 부담도 낮춘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LCC들은 달러화 부채가 자산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트리니티항공의 달러화 표시 화폐성부채는 1조 5498억원으로 자산보다 약 9229억원 많았다. 제주항공도 달러화 부채가 자산보다 약 6582억원 많았다. 에어부산의 순달러부채는 약 7734억원으로 집계됐다.

트리니티항공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환율이 10% 하락하면 세후이익이 약 8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코웨이, 공기청정 성능 높은 ‘노블 플러스’

4면 흡입 ‘4D 입체청정 필터’ 적용

코웨이가 혁신적인 공기 순환 기술과 더 정교해진 공기질 감지 능력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노블 공기청정기 플러스’ 2종(사진)을 출시했다.

노블 공기청정기 플러스는 코웨이만의 혁신적인 ‘4D 입체청정 필터 시스템’을 통해 제품 4면에서 오염된 공기를 집중 흡입하고 4D 입체필터로 강력하게 정화한다. 4D 입체필터는 접이식 사각 타워형 구조로 설계돼 4면에 단계별 필터(4D프리필터, 더블에어매칭필터·멀티큐브탈취 강화필터, 4D 에어클린 V 케어필터)가 조합돼 있다.

생활환경에 맞춰 공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더블에어매칭필터 시스템도 적용해 ▲알러젠필터 ▲펫필터 ▲미세먼지집중필터 ▲매연필터 ▲이중탈취필터 ▲새집필터 등 집안 공기 상황에 따라 특화된 6종의 필터 중 필요에 따라 2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더 강력해진 탈취강화필터는 일상 속 냄새를 98% 이상 제거하며 탁월한 탈취 성능을 발휘한다.

실내 배변 냄새와 털 날림이 고민인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특화 기능도 돋보인다. ‘벧 모드’는 바람을 일으켜 바닥의 털과 먼지를 띄워 올린 후 공기 중의 솜털과 미세먼지를 빠르게 집중 케어한다.

/김승호 기자